2021 지방직 7급 해설

<출제비중>

총론	정책	조직	인사	재무	환류	지자
2	4	4	4	3	1	2

<총평>
전반적으로 다소 어려운 난이도였습니다. 다소 지엽적인 법령과 생소한 이론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제가 수업시간에 설명한 내용에서 대부분입니다만, 어렵게 느끼셨을 만한 문제는 8번(톰슨의 기술 분류), 14번(모건이 제시한 조직의 8가지 이미지), 18번(전자정부법), 20번(사회실험)입니다.

특히, 모건이 제시한 조직의 8가지 이미지는 잘 다루지 않는 내용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잘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01. 관료제 모형에서 베버(Weber)가 강조한 행정가치는?
① 민주성
② 형평성
③ 능률성
④ 대응성

답: ③

<풀이의 핵심>
※ 관료제: 엄격한 권한의 위임과 전문화된 직무의 체계를 가지고 합리적인 규칙에 따라 조직의 목표를 능률적으로 실현하는 조직의 관리운영체제 → 능률성

<해설>
베버는 관료제가 다른 형태의 조직들에 비해 기술적 우월성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엄격한 관료제에서는 정확성, 신속성, 비모호성, 물적·인적 비용의 절감 등이 최적화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능률성과 관련됩니다.

02. 다음은 콥과 로스(Cobb & Ross)가 제시한 의제 설정 과정이다. (가) ~ (다)에 들어갈 유형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가): 사회문제 → 정부의제
○ (나): 사회문제 → 공중의제 → 정부의제
○ (다): 사회문제 → 정부의제 → 공중의제

	(가)	(나)	(다)
①	동원형	외부주도형	내부접근형
②	내부접근형	동원형	외부주도형
③	외부주도형	내부접근형	동원형
④	내부접근형	외부주도형	동원형

답: ④

<풀이의 핵심>
1) 외부주도형: 사회문제 → 사회적 이슈 → 공중의제 → 정부의제
2) 동원형: 사회문제 → 정부의제 → 공중의제화(확산)
3) 내부접근형: 사회문제 → 정부의제

<해설>
(가) 사회문제 → 정부의제: 공중의제화 과정이 없습니다. 이는 내부접근형입니다.
(나) 사회문제 → 공중의제 → 정부의제: 공중의제란 정부가 해결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공감하는 일련의 문제를 말합니다. 공중의제화 과정을 거쳐 정부의제가 되는 것은 정책 과정을 외부집단이 주도하는 외부주도형입니다.
(다) 사회문제 → 정부의제 → 공중의제: 정책담당자, 정부 내의 최고 정책결정자들이 주도하여 사회문제 중 정부의제를 채택하고, 일반대중의 지지를 얻어 정책집행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정책홍보(정부PR)가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공중의제화가 되는 동원형입니다.

03. 공무원 인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실적주의는 공무원의 인적 구성이 사회의 인구학적 특성과 비례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대

표관료제를 비판하면서 등장하였다.

② 엽관주의는 정당제도 유지에 기여하고 공무원의 정치적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오늘날에도 부분적으로 남아 있다.

③ 실적주의는 엽관주의의 폐해와 급격한 경제발전으로 행정기능이 양적으로 확대되고 질적으로 복잡해짐에 따라 공무원들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 필요해지면서 정당성이 강화되었다.

④ 엽관주의에 따른 인사는 관료기구와 집권 정당의 동질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정부가 공무원의 충성심을 확보하고 공무원을 효과적으로 통솔할 수 있다.

답: ①

<해설>

① (X) 실적주의가 대표관료제를 비판하면서 등장한 것이 아니라 실적주의의 폐단을 보완하기 위해 대표관료제가 도입되었습니다. 소극적 실적주의하에서는 실질적 기회균등을 확보하기 어려워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대표관료제가 등장하였습니다.

②, ④ (O) 엽관주의는 집권정당을 위한 기여도와 충성심의 정도 그리고 집권세력이 신뢰하는 수준에 따라 집권한 정당의 추종자들을 공무원으로 임용해야 한다는 원리입니다. 관료기구와 집권 정당의 동질성을 확보할 수 있고 집권당 당원을 관직에 임명하여 공무원들의 높은 충성심과 정치적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장·차관 임용, 광역자치단체 정무부시장과 같은 별정직 일부 등에서 엽관적 임용을 공식적으로 허용하여 오늘날에도 부분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③ (O) 실적주의의 등장배경은 엽관주의의 정치적 중립과 전문성 저해, 부정부패 등의 문제 극복, 산업화의 진전(산업혁명)에 따라 사회·경제적 환경의 규모가 확대되고 복잡성 증가로 안정적이고 능률적이며 전문성 있는 관료제의 필요성 제기 등입니다.

04. 예산 분류별 장단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예산의 기능별 분류의 단점은 회계 책임이 불명확하다는 점이다.

② 예산의 조직별 분류의 장점은 예산지출의 목적(대상)을 파악하기 쉽다는 점이다.

③ 예산의 기능별 분류의 장점은 국민이 정부 예산을 이해하기 쉽다는 점이다.

④ 예산의 품목별 분류의 단점은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저해한다는 점이다.

답: ②

<풀이의 핵심>

※ 예산의 분류 방법

구분	주요내용
기능별 분류	• 무슨 일을 하는데 얼마를 쓰는지에 초점 → 정부가 무엇을 하는지 쉽게 알 수 있어 시민을 위한 분류라고도 함 ex 유아 및 초중등 교육, 평생교육 등 • 쉬움 → 예산정책 수립 용이, 입법부의 예산심의에 도움 • 기능 중심 → 지출항목에 대한 기록 없음 → 회계책임 불명확, 입법통제의 어려움
조직별(소관별) 분류	• 누가 얼마를 쓰는가에 초점(정부의 조직단위에 따른 분류) ex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 세출예산은 모든 기관이 편성되지만, 세입예산은 자체세입이 없어 편성하지 않는 기관도 있음 • 부처 예산의 전모 파악 가능 → 소관별 예산집행 및 회계책임이 명확함 → 예산통제에 적합 • 사업 중심이 아님 → 사업의 우선순위 파악, 사업의 목적이나 활동, 예산의 성과파악이 어려움
품목별 분류	• 지출대상(인건비, 물건비, 자산취득 등)별로 분류 → 가장 전통적인 예산 분류 방법으로서 다른 예산 분류 방식과 병행해 사용 • 지출통제 용이 → 회계책임 명확(통제 지향) • 인건비가 별도의 항목으로 구성 → 인사행정에 유용한 정보 제공 • 정부전체 사업을 알기 어려움 • 지출대상에만 집행해야 함 → 예산집행의 신축성 저해

경제 성질별 분류	• 경상계정과 자본계정으로 구분하고 국민경제(소비, 저축,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 ※ 1960년부터 UN편람에 의거 작성되다가 1979년 통합예산에 흡수되어 IMF 기준에 따라 작성 •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파악 가능 → 고위 정책결정자들의 경제정책 수립에 도움 • 경상계정과 자본계정으로 분류 → 국가의 재정구조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음 • 일선공무원의 예산 집행에는 도움이 안 됨

<해설>

①, ③ (O) 예산의 기능별 분류는 무슨 일을 하는데 얼마를 쓰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정부가 무엇을 하는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출항목(ex 인건비, 여비)에 대한 기록이 없어 회계책임이 불명확합니다.

② (X) 예산의 조직별 분류는 사업 중심이 아니어서 사업의 우선순위 파악, 사업의 목적이나 활동, 예산의 성과파악이 어렵습니다.

④ (O) 품목별 분류는 지출대상에만 집행해야 해야 해서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저해합니다.

05. 다음에서 제시하는 정책결정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정책의 본질이 미래지향적 문제 해결에 있고, 정책결정에서 가치비판적 발전관에 기초한 가치지향적 행동 추구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매우 중요한 의의가 있다. ○ 대안을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 ○ 기존 정책이나 사업의 매몰 비용으로 인해 현실적합성이 떨어지는 한계가 있다.

① 시간의 흐름에 따라 환류되는 정보를 분석하여 잘못한 점이 있으면 수정·보완하는 방식이다.

② 문제성 있는 선호(problematic preferences), 불명확한 기술(unclear technology), 일시적 참여자(part-time participants)가 전제조건이다.

③ 갈등을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타협을 통한 봉합을 모색한다.

④ 같은 비용으로 최대의 목표산출을 얻을 수 있는 대안을 선택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답: ④

<풀이의 핵심>

대안을 선택할 수 있는 기준 명확 → 정책결정자가 추구하는 가치가 정해져 있음 → 합리모형

<해설>

① (X) 시간의 흐름에 따라 환류되는 정보를 분석하여 수정·보완 → 기존 정책을 토대로 약간 수정된 정책을 추구하는 방식 → 점증주의

② (X) 문제성 있는 선호, 불명확한 기술, 일시적 참여자 → 쓰레기통 모형의 전제조건

③ (X) 갈등을 완전하게 해결하지 못함 → 갈등의 준해결 → 회사모형

④ (O) 최대의 목표산출을 얻을 수 있는 대안 선택 → 합리적 대안탐색 → 합리모형입니다. 매몰비용이나 기득권(현실)을 무시하고 이상을 추구한다는 점이 합리모형의 한계입니다.

06. 정부규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종합편성 채널의 운영권을 부여하고, 이를 확보한 방송사에 대한 규제는 리플리와 프랭클린(Ripley & Franklin)의 보호적 규제 정책을 시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네거티브 규제(negative regulation)는 포지티브 규제(positive regulation)보다 자율성을 적극적으로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피규제자가 선호하는 방식이다.

③ 우리나라는 신기술과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하였다.

④ 윌슨(Wilson)의 규제정치 이론에 따르면, 대체로 경제적 규제는 고객정치의 상황으로 분류되며 사회적 규제는 기업가정치의 상황으로 분류된다.

답: ①

<풀이의 핵심>
※ 경쟁적 규제정책과 보호적 규제정책
1) 경쟁적 규제정책: 다수의 경쟁자 중 소수에게 허가 → 경쟁제한 ex TV방영권 부여 등 진입규제
2) 보호적 규제정책: 민간활동이 허용되는 조건을 설정 → 대중보호 ex 근로기준법 등

<해설>
① (X) 종합편성 채널 운영권 → 진입규제 → 경쟁적 규제정책(보호적 규제정책 X)
② (O) 네거티브 규제는 원칙허용, 예외 금지이고, 포지티브 규제는 원칙금지, 예외 허용이므로 포지티브 규제에 비해 네거티브 규제가 피규제자(규제를 받는 자)의 자율성을 보장해 줍니다.
③ (O) 우리나라는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규제샌드박스란 기존 시장에 없던 창의적·혁신적인 새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하려 할 때, 일정한 조건 아래 기존 규제를 적용하지 않거나 유예해 시장에서 테스트하거나 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제도입니다. '샌드박스'는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게 만든 모래놀이터(sandbox)에서 유래했습니다.

「행정규제기본법」
제5조의2(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또는 제품(이하 "신기술 서비스·제품"이라 한다)과 관련된 규제를 법령 등이나 조례·규칙에 규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규정 방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규제로 인하여 제한되는 권리나 부과되는 의무는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그 밖의 사항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규정 방식

④ (O) 감지된 편익이 좁게 집중되고 감지된 비용은 넓게 분산되는 고객 정치의 상황에서는 규제로 특정 고객에게 이익이 집중됩니다. 각종 사업인가 등이 그 사례입니다. 기업의 본래활동(진입, 퇴거, 가격, 품질)에 대한 규제인 경제적 규제는 대체로 고객정치의 상황으로 분류됩니다. 환경오염규제, 자동차안전규제 등 각종 사회적 규제는 감지된 편익이 넓게 분산되고(환경오염 감소에 따른 편익은 다수에게 분산) 감지된 비용이 좁게 집중(오염정화시설 설치에 따른 비용부담은 기업에게 집중)되는 기업가적 정치의 상황으로 대체로 분류됩니다.

07. 행정학의 접근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생태론적 접근 방법은 외부 환경이 행정 체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시각으로 환경에 대한 행정의 주체적인 역할을 경시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② 후기행태주의는 적실성(relevance)과 실천(action)을 강조하고, 가치중립적인 과학적 연구보다는 가치평가적인 정책연구를 지향하였다.
③ 공공선택이론은 권한이 분산된 여러 작은 조직들에 의해 공공서비스가 공급되는 것보다 단일의 대규모 조직에 의해 독점적으로 공급되는 것을 선호한다.
④ 역사적 제도주의에서 제도는 경로의존성과 관성적인 성향으로 인해 새로운 환경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수도 있다.

답: ③

<해설>
① (O) 생태론적 접근 방법은 행정조직을 하나의 유기체로 파악하고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나 문화와의 상호관계를 규명하는 접근방법입니다. 행정의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역할을 간과하였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② (O) Easton은 후기행태주의의 성격으로 적실성(실제에 들어맞음: 사회의 급박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함)과 실천성(생각한 바를 행함: 학자들의 연구결과가 정부의 정책을 통해 구현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후기행태주의는 가치중립적인 행태주의를 비판하고 가치평가적인 정책연구를 지향합니다.
③ (X) 공공선택이론은 민간의 다양한 조직들이 공공재의 생산과 공급에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조직설계의 획일주의를 타파하고 유기성과 상황적응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④ (O) 역사적 제도주의에서는 경로의존성(새로운 투입이 발생하여도 경로를 벗어나지 못하고

과거와 유사한 선택을 함)에 입각한 합리성의 제한 및 비효율적인 제도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08. 톰슨(Thompson)의 기술 분류에 따른 상호의존성과 조정 형태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① 집약형 기술(intensive technology) – 연속적 상호의존성(sequential interdependence) – 정기적 회의, 수직적 의사전달
② 공학형 기술(engineering technology) – 연속적 상호의존성(sequential interdependence) – 사전계획, 예정표
③ 연속형 기술(long-linked technology) – 교호적 상호의존성(reciprocal interdependence) – 상호 조정, 수평적 의사전달
④ 중개형 기술(mediating technology) – 집합적 상호의존성(pooled interdependence) – 규칙, 표준화

답: ④

<풀이의 핵심>

※ 톰슨(Thompson)의 기술 분류와 조직구조

구분	중개적(중개형) 기술	길게 연결된 (연속형) 기술	집약적(집약형) 기술
사례	은행, 직업소개소, 부동산중개소	대량생산 시 작업라인	종합병원(수술)
상호의존성	집단적 또는 집합적	순차적(연속적)	교호적
의사전달의 빈도	낮음(독자적으로 업무수행)	중간	높음
조정방법	규칙, 표준화	계획을 조정, 정기적 회의, 수직적 의사전달	상호조정, 수평적 의사전달, 부정기적 회의 등

<해설>

① (X) 집약형 기술 – 교호적 상호의존성 – 수평적 의사전달
② (X) 톰슨(Thompson)의 기술 분류는 조직 간·개인 간 상호의존도를 기준으로 기술을 세 가지(중개형, 연속형, 집약형)로 분류합니다.
③ (X) 연속형 기술 – 순차적 상호의존성 – 수직적 의사전달
④ (O) 중개형 기술 – 집합적 상호의존성 – 규칙, 표준화(표준화하지 않으면 다양한 고객 연결 불가능)

09. 공무원고충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5급 이상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고충을 다루는 중앙고충심사위원회의 기능은 소청심사위원회가 관장한다.
② 고충처리대상은 인사·조직·처우 등의 직무조건과 성폭력범죄, 성희롱 등으로 인한 신상문제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인정된다.
③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청에 대한 법적 기속력이 있지만, 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청에 대한 법적 기속력이 없다.
④ 고충심사위원회가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고충심사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하고 그 결정은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합의에 의한다.

답: ④

<해설>

① (O)「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 제4항 및 제5항

> 제76조의2(고충 처리) ④ 공무원의 고충을 심사하기 위하여 중앙인사관장기관(행정부는 인사혁신처장)에 중앙고충심사위원회를,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 단위로 보통고충심사위원회를 두되, 중앙고충심사위원회의 기능은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관장한다.
> ⑤ 중앙고충심사위원회는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재심청구와 5급 이상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고충을, 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소속 6급 이하의 공무원의 고충을 각각 심사한다.

② (O)「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 제1항

> 제76조의2(고충 처리) ① 공무원은 인사·조직·처우 등 각종 직무 조건과 그 밖에 신상 문제와 관련한 고충에 대하여 상담을 신청하거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누구나 기관 내 성폭력 범죄 또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담 신청이나 심사 청구 또는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③ (O)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기속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충심사위원회 결정의 경우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 등은 고충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처분청이나 관계 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속력은 없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15조 및 제76조의2 제7항).

> 제15조(결정의 효력) 제14조에 따른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 행정청을 기속(羈束)한다.
>
> 제76조의2(고충 처리) ⑦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심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처분청이나 관계 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처분청이나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이행하고, 그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행하지 못하면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④ (X) 고충심사위원회가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고충심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중앙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릅니다(위원 과반수의 출석X).

> 「공무원 고충처리규정」
> 제7조(고충심사절차) ① 고충심사위원회가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고충심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충심사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
> 제10조(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 ①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제3조 제6항 전단, 제3조의2 제6항 전단, 제3조의3 제6항 전단 또는 제3조의4 제5항 전단에 따른 위원 5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른다.
> ② 중앙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위원(「국가공무원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의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을 말한다)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른다.

10. 프레스먼(Pressman)과 윌다브스키(Wildavsky)의 성공적인 정책집행에 관한 오클랜드 사례 분석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책집행에 개입하는 참여자의 수가 적어야 한다.
② 정책집행은 정책결정과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③ 정책집행을 위한 프로그램 설계가 단순해야 한다.
④ 최초 정책집행 추진자 또는 의사결정자가 지속해서 집행을 이끌어야 한다.

답: ②

<풀이의 핵심>
※ 프레스만과 윌다브스키의 집행론에서의 정책집행 실패요인
1) 집행과정에서 과도한 참여자: 집행과정에서 협조와 지지를 얻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림
2) 중요한 리더의 교체로 추진력 상실
3) 정책수단의 부적절성: 집행현장에서 실현가능성 없는 정책수단을 채택함
4) 부적절한 기관의 정책집행: 부적절한 집행기관이 정책집행을 담당하면 부적절한 정책수단을 선택하게 됨

<해설>
① (O) 집행과정에서 과도한 참여자가 정책집행의 실패요인이라고 보았으므로 정책집행에 개입하는 참여자의 수가 적어야 합니다.
② (X) 정책집행과 정책결정을 분리하는 것은 정책집행을 단순하고 기계적인 것으로 가정한 고전파 행정학의 집행관입니다. 프레스만과 윌다브스키의 집행론에서부터 현대적 정책집행론이 시작되었습니다.
③ (O) 집행현장에서 실현가능성이 없는 정책수단을 채택하면 실패합니다. 정책의 단순화가 바람직합니다. 복잡한 정책프로그램은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을 증가시킵니다.
④ (O) 집행의 핵심적인 추진집단이나 리더십의 계속이 성공적 집행을 위해 필요합니다.

※ (참고) 집행론의 주요내용: 1966년 미국 캘리포니아 주 오클랜드 지역 흑인취업프로그램이

3년이 지난 1969년에 보니 약 3백만 달러가 지출되었고 새로운 일자리가 마련된 것은 약 10개 정도에 불과했음 → 프레스만(Pressman)과 윌다브스키(Wildavsky)는 집행과정에서 실패한 것은 누구의 고의적인 방해가 있어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요인이 결합되어 어쩔 수 없이 나타나게 된 것이라 봄

11. 다음 중앙인사기관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행정수반이 인사관리에 직접적인 책임을 지며, 인사기관의 장은 행정수반을 보좌하여 집행업무를 담당한다. ○ 인적자원 확보, 능력발전, 유지, 보상 등 인사관리에 대한 기능을 부처의 협조 하에 통합적으로 수행한다. ○ 인사기관의 결정과 집행의 행위는 행정수반의 승인과 검토의 대상이 된다.

① 정치권력의 부당한 개입을 막아 정치적 중립성과 공직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② 인사기관의 구성방식을 통해서 인사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
③ 합의에 따른 결정방식으로 인사의 공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④ 한 명의 인사기관의 장이 조직을 관장하고 행정수반의 지휘 아래 놓이게 된다.

답: ④

<풀이의 핵심>
행정수반이 책임을 짐 → 행정부 소속 → 비독립 인사기관의 장 → 단독
따라서 '다음 중앙인사기관의 유형'은 비독립단독형입니다.

<해설>
①, ②, ③ (X) 정치적 영향을 배제, 인사행정의 계속성 및 인사정책의 안정성을 확보, 합의에 따른 결정방식은 독립합의형과 관련이 있습니다.
④ (O) 비독립단독형은 행정수반에 의해 임명된 한 사람의 기관장이 의사결정을 합니다.

12. 조직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카플란(Kaplan)과 노턴(Norton)은 균형성과표(BSC)의 네 가지 관점으로 고객 관점, 내부프로세스 관점, 재무적 관점, 학습과 성장 관점을 제시하였다.
② 민츠버그(Mintzberg)는 조직의 5개 구성 요소로 전략적 최고관리층, 중간계선관리층, 작업층, 기술구조, 지원 막료를 제시하였다.
③ 허시(Hersey)와 블랜차드(Blanchard)는 부하의 성숙도가 높은 경우 지시적 리더십이 효과적이라고 보았다.
④ 베버(Weber)는 법적·합리적 권한에 기초를 둔 이념형(ideal type) 관료제의 특징으로 법과 규칙의 지배, 계층제, 문서에 의한 직무수행, 비개인성(impersonality), 분업과 전문화 등을 제시하였다.

답: ③

<풀이의 핵심>
※ 허시(Hersey)와 블랜차드(Blanchard)의 생애주기이론
1) 부하의 성숙단계에 따라 효율적인 리더십 스타일이 달라진다고 전제
2) 부하의 성숙도에 따른 리더십 유형

부하의 성숙도	아주 낮음	낮음	높음	아주 높음
리더십 유형	지시형	설득형	참여형	위임형

<해설>
① (O) 균형성과표의 네 가지 관점은 '재무적 관점', '고객의 관점', '내부프로세스 관점', '학습 및 성장의 관점'입니다.
② (O) 민츠버그의 조직유형론에서는 조직의 기본적인 구성부분으로 작업계층, 최고관리층, 중간관리층, 기술구조, 지원참모를 제시하였습니다.
③ (X) 허시와 블랜차드는 부하의 성숙도가 높은 경우 참여형, 위임형 리더십이 효과적이라고 보았습니다. 참고로 성숙도란 직무상의 성숙도

와 심리상의 성숙도로 이루어지는데, 직무상의 성숙도는 부하의 과업 관련 기술과 기술적 지식의 정도를 의미하고, 심리적 성숙도는 부하의 자신감과 자존심의 정도를 의미합니다.

④ (O) 베버의 이념형 관료제의 주요특징으로 모든 권한과 관할범위의 규정, 계서제적 구조, 문서화의 원리, 임무수행의 비개인화, 관료의 전문화와 전임화 등을 들 수 있습니다.

13. 지방분권화가 확대되는 이유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내생적 발전전략에 기반한 도시경쟁력 확보가 중요해지고 있다.

② 중앙집권 체제가 초래하는 낮은 대응성과 구조적 부패 등은 국가 성장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③ 사회적 인프라가 어느 정도 갖춰진 국가에서는 지역 간 평등한 공공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④ 신공공관리론에 근거한 정부혁신이 강조되고 있다.

답: ③

<풀이의 핵심>

※ 지방분권화 촉진요인

1) 중앙집권적 국정운용이 산업·지역 간의 불균형과 개인 간의 소득격차를 발생시키고, 수도권의 과밀화 현상을 야기하는 등 지역 간 불균형이 발생하는 경우 지방분권이 필요함
2) 개별주체가 스스로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
3) 정보기술의 발달에 따른 지방분산화(어디서든 근무 가능, 재택근무 확산)
4) 대도시로 과도히 몰려 공기혼탁과 교통혼잡, 사회불안 등 발생 → 교외로 탈출하는 U턴 현상
5) 지역사회의 고유성·자주성을 중시하는 지방분권화 추구의 정신적 기초가 됨

<해설>

① (O) 내생적 발전이란 지역 고유의 특성과 자원을 적극 활용하는 발전을 의미합니다. 즉, 지역발전의 동인(動因)을 지역 내부에서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제화로 경쟁 환경 조성(ex 자유무역)되어 과거와 같이 국가가 외교·안보·관세의 보호막을 통하여 자국의 국민과 기업을 보호해 줄 수 없게 됨에 따라 개별주체가 스스로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성이 높아졌고, 이는 지방분권화 확대요인입니다.

② (O) 중앙집권체제의 한계는 지방분권화 확대요인이 됩니다.

③ (X) 지역 간 평등한 공공서비스 수요는 중앙정부차원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복지국가의 실현정책에 따라 국민적 최저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관여가 필요합니다.

④ (O) 신공공관리론에서는 분권적 정부, 지역사회에 힘을 부여하는 정부를 강조합니다.

14. 모건(Morgan)이 제시한 조직의 8가지 이미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문화로서의 조직(Organizations as Culture)

② 적응적 사회구조로서의 조직(Organizations as Adaptive Social Structure)

③ 심리적 감옥으로서의 조직(Organizations as Prison Metaphor)

④ 흐름과 변환과정으로서의 조직(Organizations as Flux and Transformation)

답: ②

<풀이의 핵심>

※ 모건이 제시한 조직의 8가지 이미지

1) 모건은 '조직의 8가지 이미지'라는 책에서 다양한 조직이론들을 여러 가지 이미지 또는 관점으로 정리하였음
2) 모건은 모든 조직이론들이 나름의 '렌즈'를 통해 조직이 가진 특정한 어느 한 이미지를 다른 이미지들보다 집중적으로 조명하게 된다고 주장
3) 조직의 8가지 이미지

기계장치로서의 조직	조직을 합리적이고 기술적인 과정으로 이해 → 조직의 인간적인 측면을 과소평가, 조직환경을 등한시하는 경향
유기체로서의	조직의 욕구와 환경과의 상호관계를 이해

조직	하고 관리하는 방식에 초점 → 환경과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수행하는 유기체의 이미지를 사용, 조직에 대한 보다 개방적이고 유연성 잇는 견해를 가지게 해줌
두뇌로서의 조직	조직을 인간의 두뇌처럼 간주 ex 학습조직
문화로서의 조직	조직을 문화로 인식하는 관점 → 조직이 어떻게 공유된 의미체계에 근거하여 운영되는지를 보여줌
정치체제로서의 조직	조직의 활동을 형성해 가는 상이한 이해관계, 갈등 그리고 권력행사에 초점
심리적 감옥으로서의 조직	조직을 일종의 심리적인 현상으로 봄 → 조직이 사회적으로 구축된 실체이면서도 또한 조직 스스로 독자적인 존재와 힘을 갖게 되어 조직을 만든 사람들에게 일정한 통제력을 행사해 갈 수 있게 됨
흐름과 변환과정 으로서의 조직	사회생활을 형성하는 변화의 논리들에 초점 → 변화의 본질과 원천을 파악
지배를 위한 도구 로서의 조직	조직을 다른 이해관계를 희생해가면서 특정 이해관계를 추구하는 하나의 지배양식으로 파악 → 조직이란 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소수 지배 엘리트의 이기적인 이해관계 추구에 기여하는 지배도구로서 이용되어져 왔다고 봄

<해설>
모건이 제시한 조직의 8가지 이미지에 적응적 사회구조로서의 조직은 없습니다.

15. (가) ~ (라)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 정부는 재정운용의 효율화와 건전화를 위하여 매년 해당 회계연도부터 [(가)]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다음 연도의 예산안편성지침을 매년 [(나)]월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회계법」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 4월 [(다)]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예산의 편성 및 의결, 집행, 그리고 결산 및 회계검사의 단계가 일정한 주기로 반복되는 것을 예산주기 또는 예산순기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통상 [(라)]년이다.

	(가)	(나)	(다)	(라)
①	10	3	10	1
②	5	3	10	3
③	5	5	20	1
④	10	5	20	3

답: ②

<해설>
(가) 재정운용계획 → 5회계연도
(나) 예산안편성지침은 3월 31일까지 통보
(다) 국가결산보고서는 4월 10일까지 감사원 제출
(라) 우리나라의 경우 예산주기는 통상 3년임 → 예산의 편성과 심의는 전년도, 예산의 집행은 당해 연도, 결산 및 회계검사는 다음 연도에 수행됨

「국가재정법」
제7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① 정부는 재정운용의 효율화와 건전화를 위하여 매년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재정운용계획(이하 "국가재정운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예산안편성지침의 통보)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다음 연도의 예산안편성지침을 매년 3월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9조(국가결산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회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작성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국가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4월 1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6. 공직윤리 확보를 위한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자등으로부터 보호조치를 신청 받은 때에는 바로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았는지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②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 전 3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 퇴직일로부터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단,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취업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재직자는 퇴직공직자로부터 직무와 관련한 청탁 또는 알선을 받은 경우 이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국민권익위원회는 접수된 부패행위 신고사항을 그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단,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보완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답: ②

<풀이의 핵심>

※ 취업심사대상자: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 퇴직일로부터 3년간 취업할 수 없음

<해설>

① (O)「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64조의2

> 제62조의2(신분보장 등의 조치 신청 등) ① 신고자는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았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해당 불이익조치에 대한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신분보장 등 조치"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제3항에 따라 각하 결정된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X)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 전 3년이 아닌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 퇴직일로부터 5년이 아닌 3년간 취업할 수 없습니다.

> 「공직자 윤리법」
>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① 제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12호(재산등록의무자)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와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 및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이하 이 장에서 "취업심사대상자"라 한다)은 퇴직일부터 3년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취업심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거나 취업승인을 받은 때에는 취업할 수 있다.

③ (O)「공직자 윤리법」제18조의4

> 제18조의4(퇴직공직자 등에 대한 행위제한) ② 재직자는 퇴직공직자로부터 직무와 관련한 청탁 또는 알선을 받은 경우 이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O)「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59조

> 제59조(신고의 처리) ⑥ 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항을 그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제1호에 따른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보완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17. 우리나라 지방재정조정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방교부세법」상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및 소방안전교부세로 구분된다.

② 지방교부세는 중앙정부가 국가 사무를 지방정부에 위임하거나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사업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③ 조정교부금은 전국적 최소한 동일 행정서비스 수준 보장을 위해 중앙정부가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자치단체에 배분하는 것이다.

④ 지방교부세 대비 국고보조금의 비중 증가는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강화한다.

답: ①

<해설>
① (O) 지방교부세의 종류에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가 있습니다.
② (X) 중앙정부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행에 드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충당 → 국고보조금에 대한 설명
③ (X)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자치단체에 배분 → 지방교부세에 대한 설명입니다. 조정교부금은 상급자치단체에 의한 재정조정제도입니다.
④ (X) 국고보조금은 대부분 용도와 수행조건 등을 지정하고, 국가로부터 교부되는 의존재원입니다. 지방교부세 대비 국고보조금의 비중이 증가되었다고 해서 지방재정의 자율성이 높아지지 않습니다.

18. 「전자정부법」상 전자정부 추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고등교육법」상 사립대학은 적용받지 않는다.
② 행정기관 등의 장은 해당기관의 전자정부의 구현·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전자정부의 날이 지정되었다.
④ 필요한 경우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지역정보통합센터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답: ①

<해설>
① (X) 사립대학도「전자정부법」의 적용대상입니다.
② (O)「전자정부법」제5조의2
③ (O)「전자정부법」제5조의3
④ (O)「전자정부법」제55조

「전자정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라.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제5조의2(기관별 계획의 수립 및 점검)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5년마다 해당 기관의 전자정부의 구현·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관별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의3(전자정부의 날) ① 전자정부의 우수성과 편리함을 국민에게 알리고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는 등 지속적으로 전자정부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6월 24일을 전자정부의 날로 한다.

제55조(지역정보통합센터 설립·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역정보화를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정보통합센터를 설립·운영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지역정보통합센터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19.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정부가 지역주민에 대해 비과세, 감면, 공제 등 세제상 각종 유인장치를 통해 간접적 지원을 해주는 제도이다.
② 예비타당성조사는 총사업비와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일정 금액 이상인 신규사업 중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하며, 국회가 의결로 요구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예산성과금은 수입이 증대되거나 지출이 절약된 때에 이에 기여한 자에게 지급할 수 있으며 절약된 예산은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없다.
④ 총사업비관리제도는 소요 기간에 관계없이 고속도로, 국도 등 일정 규모 이상의 대규모 사업의 경우, 사업 규모·총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을 정하여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협의할 것을 요구한다.

답: ②

<해설>

① (X) 비과세, 감면, 공제는 조세지출과 관련이 있습니다. 조세지출이란 각종 사회적·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세제상의 혜택을 통해 특정 활동 또는 특정 집단에 지원을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② (O)「국가재정법」제38조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X) 예산성과금은 예산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에게 성과급 지급하거나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없음 X).

「국가재정법」
제49조(예산성과금의 지급 등)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수입이 증대되거나 지출이 절약된 때에는 이에 기여한 자에게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절약된 예산을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④ (X) 총사업비관리제는 완성에 2년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이 대상입니다(소요 기간에 상관없이 X).

「국가재정법」
제50조(총사업비의 관리)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완성에 2년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하여는 그 사업규모·총사업비 및 사업기간을 정하여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협의를 거친 사업규모·총사업비 또는 사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20. 사회실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자연과학의 실험실 실험과는 달리 상황에 따라 통제집단(control group) 또는 비교집단(comparison group) 없이 진행할 수 있다.
ㄴ. 진실험 방법을 활용하여 사회실험을 진행하면 호손 효과(Hawthorne Effect)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ㄷ. 아직 검증되지 않은 정책 프로그램에 대규모 투자를 하기 전에 그 결과를 미리 평가해 보는 것이 중요한 목적 중 하나이다.
ㄹ. 실험 집단과 비교집단을 무작위 배정(random assignment)할 수 없어 집단 간 동질성 확보가 불가능하면, 준실험(quasi-experiment) 방법을 채택하여 진행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답: ④

<풀이의 핵심>

※ 진실험, 준실험, 비실험

구분	실험집단	통제집단
진실험	O	O(동질적 집단)
준실험	O	O(비동질적 집단)
비실험	O	X

<해설>

ㄱ. (X) 통제집단이나 비교집단 없이 진행하는 실험은 비실험입니다. 사회실험은 실험실이 아닌 사회라는 상황 속에서 행하여지는 실험입니다. 원칙적으로 실험이라면 진실험을 의미하지만, 진실험이 지닌 커다란 장점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준실험이 현실적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으므로 넓은 뜻으로 사회실험이라면 양 실험 모두를 포함합니다.

ㄴ. (X) 실험 환경에서는 실험 대상자들이 실험 대상으로서 그들이 관찰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호손효과 발생).

ㄷ. (O) 사회실험은 아직 검증되지 않은 정책 프로그램에 대량 투자를 하기 전에 그 결과를 미리 평가해 봄으로써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검증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ㄹ. (O) 준실험은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동질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상태, 무작위 배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적용합니다.